바이든과 '48초' 기시다와 '30분'… 짧은 만남 성과는?

바이든과 찰스3세 리셉션 포함 세차례 조우…IRA 우려 전달 그쳐

기시다와는 약식회담…현안 해결위해 양국관계 개선 원칙적 공감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 환담을 나눴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뉴욕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과 심도있는 회담을 갖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유엔총회 정상외교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환담은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로 애초 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의 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은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막판에) 이 회의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무대 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중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쳤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서 있다가 손을 맞잡고 48초 가량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으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추가로 짧은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을 포함해 이날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총 세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IRA에 대한 국내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했다.

미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났다. 유엔총회 참석차 나란히 뉴욕을 찾은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이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로 2년 9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맨해튼 유엔 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5월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뉴욕에서 약 30분 동안 만난 사실을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현재의 전략 환경에 있어 한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한달째 32%…부정평가 다시 60%

'김건희 특검' 찬성 59%…순방외교 "성과 없을 것" 5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2%로 한 달째 동률인 가운데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 조사와 같은 32%였다.

격주로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8월 2주차에 28%로 떨어졌다가 8월 4주차에 32%로 회복, 9월 2주차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60%다. 모름·무응답은 1%포인트 내린 8%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조문 취소' 논란이 불거진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두고는 응답자의 55%가 '성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40%였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인식은 찬성이 59%,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29%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이들 중에서는 특검 찬성 비율이 6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4.9%다.

/연합뉴스

주호영 "野 7대 입법과제는 무책임 선심성 정책" 입법 저지키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7대 입법과제'를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원들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면서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래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행 비대위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30조원 매입하는 방안,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미 북핵대표, 北 '공세적 핵정책 법제화' 우려

"7차 핵실험 감행시 전례없는 대응 직면하게 될 것"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조찬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정책 법령에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공개했다. 법령이 명시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내외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된 양국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과 김 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는 북한에 지속해서 대화 재개 시도를 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